

2026년 예산,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여야 간 합의하여 국회 의결·확정

- '26년 총지출 규모는 728.0 → 727.9조원으로 △0.1조원 순감
- GDP 대비 관리수지는 △4.0→△3.9%로 개선, 국가채무는 51.6% 유지
- 미래성장동력 확보, 민생 지원, 국민안전, 지역경제활성화 등 중점 보강

국회는 '25.12.2일(화) 본회의를 개최하여 「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」을 의결·확정하였다.

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, AI 지원 등 총 △4.3조원을 감액하고, 감액된 재원 내에서 ①미래 성장동력 확보, ②민생지원 예산, ③재해예방·국민안전 소요와 ④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하여 총 +4.2조원을 증액하였다. 이로 인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△0.1조원 순감하였다.

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+1.0조원 증가(675.2조원)하여,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△4.0%에서 △3.9%로 개선되고,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.6%로 유지되었다.

'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간 합의한 만큼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(1.1일)와 동시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예산실 예산총괄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김경국 (044-215-7110) 신경아 (ska0511@korea.kr)
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박정민 (044-215-7130) 박근형 (rmsgudkorea@korea.kr)

< 국회 확정 예산의 주요 특징 >

- ① '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에서 정해진 법정기한(12.2일) 내에
여야 간 합의를 거쳐 예산안 의결·확정
- ② 국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총지출은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규모
내에서 증액하고, 총수입 증가분*(+1.0조원)은 재정수지개선에 활용
*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전망 상향에 따른 한은잉여금 증가(+0.85조) 등
→ 이에 따라 총지출은 727.9조원, 관리수지는 GDP 대비 △3.9%,
국가채무는 GDP 대비 51.6% 전망
- ③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미래투자,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소요는 증액
 - ①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신산업투자를 확대*하고,
저출생·미래세대 지원**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
*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(+975억)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, AI 모빌리티 실증도시(+618억)
**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(+158억),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
 - ② 장애인·노인·위기가구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* 및 서민 생계비
부담 경감**으로 취약계층·민생경제 지원에도 집중
* (장애인) 최종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(+63억), (노인)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(+137억) 등
**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,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, 도시가스 신규 보급 등
 - ③ 가뭄·산불 등 재해예방 및 국민안전 관련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였고,
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AX 등 산업·인프라 예산도 반영
- ④ 국정자원관리원 화재*, 대미 관세 협상**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
사안도 충분히 고려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·반영
*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 및 DR 구축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(+0.4조)
** 한미간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대미통상프로그램을
감액(△1.9조)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 반영(+1.1조)

I. 국회 확정된 재정총량 변화

① '26년 총지출은 727.9조원 (정부안 대비 △0.1조원)

- 총수입은 정부안 674.2 → 최종 675.2조원으로 **+1.0조원** 증가
 -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유지 등에 따라 △120억원 감소
 - 국세 외 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(+0.85조원) 등 +1.0조원 증가
- 총지출은 정부안 728.0 → 최종 727.9조원으로 **△0.1조원** 감소
 - * 국회 심사단계에서 △4.3조원 감액(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), +4.2조원 증액
 -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+8.1%로 정부안 수준 유지

② '26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△3.9% (정부안 대비 +1.1조원) 국가채무 GDP 대비 51.6% (정부안 대비 △1.3조원)

-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정부안 △4.0 → 최종 △3.9%로 **+0.1%p** 개선
- 국가채무는 GDP 대비 정부안 51.6 → 최종 51.6%로 **정부안 수준** 유지

< 2026년 재정운용 모습 >

(단위 : 조원, %)

	'25년		'26년		증감	
	본예산 (A)	2회 추경	정부안 (B)	최종 (C)	국회증감 (C-B)	전년대비 (C-A)
◇ 총 수 입	651.6	642.4	674.2	675.2	1.0	23.6
◇ 총 지 출 (증가율,%)	673.3 (+2.5)	703.3 (+7.1)	728.0 (+8.1)	727.9 (+8.1)	△0.1	54.6
◇ 통합재정수지 (GDP대비,%)	△21.7 (△0.8)	△60.8 (△2.3)	△53.8 (△2.0)	△52.7 (△1.9)	1.1	△31.0
◇ 관리재정수지 (GDP대비,%)	△73.9 (△2.8)	△111.6 (△4.2)	△109.0 (△4.0)	△107.8 (△3.9)	1.1	△34.0
◇ 국가채무 (GDP대비,%)	1,273.3 (48.1)	1,301.9 (49.1)	1,415.2 (51.6)	1,413.8 (51.6)	△1.3	140.5

II. 주요 증액 내용

1

미래 성장동력 확보

[+1.7조원]

【 신산업 투자 확대 】

- (신재생에너지)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ESS 설치 지원을 확대(+250개소)하여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(+975억원)
 - 노후 재생e인버터 SW 개선사업의 국비지원을 대폭 상향(70→100%) 및 계통취약지역 내 인버터 전수 조사(7.6만개)로 전력망 안정화 도모
 - 사립학교(100개), 공영주차장(50개)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(+118억원)하고,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* 사업(+110억원) 확대로 탄소중립 뒷받침
 - * 신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총 2,000억원 이상 대상 4%p 이자 지원
 -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정용 히트펌프 추가 보급(1.6→2.6천가구, +55억원)
- (첨단산업 육성)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*를 신규 조성(+618억원)하고, 고신뢰·고정밀 완전자율운행선박 기술 개발(+222억원)
 - * 도시단위 대규모 실증을 위해 자율주행차량 200대 투입 → 데이터 수집·학습
 -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* 구축을 지원(+500억원)하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 지원
 - * 전선로, 상·하수도관, 가스관 등을 공동으로 매설하기 위한 지하시설
- (인재양성) KAIST·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으로 미래인재 육성(+126억원)
 - Top-Tier 등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요자를 배치·채용하는 벤처기업 80개 대상 1.5~2억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(+140억원)
 - * 기존 창업패키지 내 AI·딥테크 트랙 확대 후 고용부 사업과 연계 지원
- (수출·통상)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를 반영(+1.1조원)하고,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0.3조 추가공급(+400억원)
 - 온라인 수출기업 대상 물류비 지원도 확대(1,131→1,591개사, +50억원)

【 저출생 · 미래세대 지원 】

- **(임산부)** 월 4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명에게 지급(+158억원)하고,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*를 지원(+18억원)하여 산모 건강 증진
 - * 10년 이상 분만산부인과 12개소 대상 노후장비 교체비용 지원
 -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(+3억원)
- **(보육)** 3년간 동결되었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원 인상(26→28만원)하고, 교사-아동비율 개선*에 따른 추가 채용 교사에도 수당 지급(+445억원)
 - * '26년부터 0세반 교사:아동 비율 1:3 → 1:2로 개선, +1.5만명 추가 채용
 - 0~2세 기관보육료를 추가 인상(3→5%)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(+192억원)
- **(돌봄)** 조손가정에 방문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을 확대*(3→7개소)하고,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**을 늘려(360→506명) 취약 아동 돌봄 강화
 - * ('25년) 대구, 충북, 전북 → ('26년) +4개소 추가
 - ** 학대피해,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위탁 보호하는 가정에 월 100만원 지급
 -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(+54억원)을 통해 돌봄인력의 전문성 · 신뢰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 제고
- **(미래세대)** 당초 中企 신규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*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지원 대폭 확대(10→160만명)
 - * 연소득 6천만원(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) 이하 청년의 월 납입금 일반형6%/우대형12% 지원

우대형 대상(12%)		정부안	국회 확정
중기 재직자	신규 (6개월 내)	○ (연소득 6,000만원 이하 & 가구중위 200% 이하)	○ (연소득 6,000만원 이하 & 가구중위 200% 이하)
	기존	X	○ (연소득 3,600만원 이하 & 가구중위 150% 이하)
소상공인		X *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일반형 지원	○ (연매출 1억원 이하 & 가구중위 150% 이하)

【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 강화 】

- (노인)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*(183→229개) 하여,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
 - * 전체 지방정부를 의료취약지,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4~10억원 차등 지원
- (장애인)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% 인상*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(15→20만원)을 인상하여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(+94억원)
 - *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게 지급(기존3,000→변경3,300원)
 - 장애아동의 언어발달, 심리치료 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 인상(20→20.5만원)으로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뒷받침(+42억원)
 -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 200명 확대(+46억원)
- (위기가구)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 · 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의 지원 기간 및 규모 확대*(+24억원)
 - * (기존) 1~4월 미운영, 5~12월 130개소 → (변경) 1~4월 100개소, 5~12월 150개소

【 의료체계 강화 】

- (지역·필수의료)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상향*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한 지역의료 체계 강화(+170억원)
 - * (기존) 과목당 6억원 → (변경) 과목당 의료양호지역7억원 / 의료부족지역8억원
 - 중증외상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계류장을 구축(+45억원)하고,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(+3억원)로 필수의료 역량 강화
- (심리안정)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(467명) 확충을 신속히 지원하고,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로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구축(+20억원)
 - 청소년 온라인 상담 적시대응을 위한 1388센터 인력 16명 증원(+4억원)

【 민생경제 · 노동 】

- (생계비 절감)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(월 20만원)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및 3자녀·저소득 가구는 가격을 인하하여 지원 강화(+305억원)

< 대상별 가격(GTX·광역버스 제외) > * : 정부안 : 국회추가

대상	수도권	비수도권	인구감소지역	
			우대지원	특별지원
일반형	6.2만원	5.5만원	5.0만원	4.5만원
청년·어르신·2자녀	5.5만원	5.0만원	4.5만원	4.0만원
3자녀·저소득	4.5만원	4.0만원	3.5만원	3.0만원

-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* 금리를 인하(15.9→12.5%)하고, 사회적배려대상자(기초수급자, 차상위 등)는 9.9%까지 인하(+297억원)
 - * (대상) 연소득 3,500만원 이하 & 신용 하위 20%, (한도) 최대 1,000만원
-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용을 보조(70%)하여 도시가스 신규 보급을 통한 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(20개소, +1,400억원)
- (노동) 근로감독관 864명(중앙500명 + 지방364명) 추가 채용에 따른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차질없는 근로감독업무 뒷받침(+21억원)
 - 소규모 작업장에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(1,200→1,800개사, +42억원)하고, 산재병원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회복 지원(+72억원)

【 문화 】

- (예술인 지원) 초중고 예술강사의 강사료, 강의시간을 대폭 확대*하여 예술교육 내실화 및 강사 처우개선(+29억원, 특별교부금 포함 +214억원)
 - * (강사료) 1인당 645 → 1,158만원/年, (시간) 1인당 150 → 269시간/年
 - 은퇴 체육인 1,500명에 지도자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 지원(+8억원)
- (출판산업 육성)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(6→9개소),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(25→120개) 등을 확대하여 출판산업 인프라·경쟁력 강화(+60억원)

【 재해 예측·예방·대응 】

- (국정자원) 국가전산망의 신속 복구 및 DR구축 등 재난 대응력 제고(+0.4조원)
 - 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재난 상황에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(+3,434억원)
 - 화재복구에 활용된 클라우드·장비의 임차료를 반영(+446억원)하고, 배터리 화재 예방*을 위한 교체 소요(+62억원)도 차질없이 지원
 - * 국자원 화재 이후 특별점검에 따라 전기설비규정을 미충족한 시설의 안정성 강화
- (재해) 가뭄 대응을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추가 설계(2→3개소)하고, 계단식논·인공습지 등 수질개선(+107억원)도 병행하여 용수확보 노력
 - 특수진화대가 상주하는 산불대응센터(10개소)를 조성하여 초기대응력을 강화 및 산림 내 국가유산 자동소화설비(5개소) 설치로 대형산불 대비
 - 계측기 설치, 예측모형 등 현장자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(+25억원)
- (일상회복) 심리상담 등 오송·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, 현장인력(경찰, 소방관)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·상담 지원(+47억원)

【 범죄 근절 】

- (범죄예방)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지원 및 경찰주재관·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+54명 추가 확보(+82억원)
 - 여행자정보 동시구현 시스템*을 지방공항 7개소에 추가 배치하고,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위해물질 반입 차단(+29억원)
 - * 우범여행자 정보와 X-ray 영상을 동시 제공하여 검증력 제고(현재 인천공항만 도입)
- (보안) 사이버공격 예방-탐지-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* 고도화(+145억원) 및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의 책임 확보(+77억원)
 - * (예방) AI모델 활용 취약 분석 등 +35억원, (탐지) 웹공격 사이버 대피소 등 +19억원 (조사·분석)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, 침해사고 원인분석·탐지 도구 등 +83억원

【 국방·보훈 】

- (복무여건 개선) 휴일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상향(6→10만원)하고, 장기근속자 대상 격년 주기 건강검진비(20만원) 지원
 - 전체 소령 대상 월 5만원(무보직은 3만원)의 직책수행경비 신설(+55억원)
- (방위력) 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(+106억원) 및 해병대 K-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(총사업비 0.4조원) 반영으로 전력보강 지원
 - 공중 작전영역 확장을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기 1대 추가확보(+300억원)
- (보훈) 참전명예수당 등을 +1만원 인상*하여 보훈예우 강화(+192억원)
 - * (참전) 48→49만원, (무공영예) 54~56→55~57만원, (4.19공로) 49→50만원
 - 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도 '22년 도입 후 최초 인상(10→15만원)

4

지역경제 활성화

(+1.6조원)

【 농어촌 】

- (생활여건)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(7→10개)하여 보다 폭넓게 농어가 소득망 확충(+637억원)
 - * 현재 7개소(연천, 정선, 청양, 순창, 신안, 영양, 남해) 선정, 22.8만명 대상
→ 공모평가 순위를 고려하여 3개소(곡성, 옥천, 장수) 추가, 32.5만명 대상
 - 일손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인력중개센터를 확대(110→130개소)하고,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근로자 대상 기숙사 10개소 확보(+20억원)
 -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 4척 건조를 지원하고, 대상 해안범위도 확대(1,016→1,249km)하여 어촌 환경 개선 도모(+41억원)
- (농어가지원) 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(10→20천ha)에 따라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 지원하여 전략작물 생산 및 유통 기반 확충(+77억원)
 - 무기질비료 가격(80천원/톤)을 보조(+156억원)하여 농가 가격부담 완화

【 지방거점성장 】

- (산업) 지역거점 AX 지원*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(+756억원)를 뒷받침하고, 지역주도형 제조업 AI 전환도 2개 지역 추가 지원(5→7개)
 - * (전북) AI 메타팩토리 구축, 협업지능 피지컬 AI 등 +367억원
 - (경남)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(LAM) 등 +267억원
 - (광주) 모두의 AI 플랫폼, AI 실증도시 등 +57억원
 - (대구) 첨단 바이오 제품 표준 AX 제조 공정 등 +40억원
 - (충청·강원·제주) 권역별 특화형 AX 관련 사업기획비 +25억원 반영
- 석유화학·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*(+67억원) 강화 및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** 확대(+250억원)
 - * (대상) 운전자금 → 운전+시설자금, (한도) 10 → 15억원
 - ** 채용지원금, 교통비, 정주여건 개선 등에 폭넓게 지원 가능(개소당 30~80억원)
- (인프라)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 추진(+100억원)하고, 서대전~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(+23억원) 등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
 -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(+44억원)로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하고, 취양수시설 48개소의 조기 준공(+90억원)으로 충분한 용수확보 지원
 -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지원금 상향(14→15억원/노선)
- (기타) SOC, R&D, 문화 등 기타 민생·지역 현안 사업 +1.2조원 반영

III. 향후 계획

□ 2026년 예산 공고안·배정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

- 정부는 12.9일(화) 국무회의에 「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」과 「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」을 상정·의결 예정
- 세출예산의 75%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미래성장,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

□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착수

- 내년 회계연도 개시(1.1일)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

※ (참고)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

구 분	'25년 본예산	'26년 정부안(A)	'26년 최종(B)	(조원)
				증감 (B-A)
◆ 총지출	673.3	728.0 (+8.1%)	727.9 (+8.1%)	△0.1
1. 보건·복지·고용	248.7	269.1	269.1	△0.0
2. 교육 (교부금 제외)	98.5 (26.2)	99.8 (28.2)	99.9 (28.3)	0.1 (0.1)
3. 문화·체육·관광	8.8	9.6	9.6	0.1
4. 환 경	13.0	14.0	13.9	△0.1
5. R&D	29.6	35.3	35.5	0.2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28.2	32.3	31.8	△0.6
7. SOC	25.4	27.5	27.7	0.3
8. 농림·수산·식품	25.9	27.9	28.0	0.2
9. 국 방	61.2	66.3	65.9	△0.4
10. 외교·통일	7.7	7.0	7.0	0.0
11. 공공질서·안전	25.0	27.2	27.3	0.1
12. 일반·지방행정 (교부세 제외)	110.7 (43.6)	121.1 (51.7)	121.4 (52.0)	0.3 (0.3)